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 미래)

회의록

제1세션: 정당민주주의의 미래

질문 1. 2020년 10월 30일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민주적 가치와 규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평가에 있어 제도적 완벽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제도보다는 제도의 빈틈을 잇는 절제, 관용, 타협 등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가 해당 사회 구성체, 국가,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를 가늠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다만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로써, 민주사회에서 개혁이 선동이 아닌 설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박용진 의원은 민주사회의 전제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가 100% 관철되기를 원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일부 관철시켜 나간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과거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행정과 달리, 국회로 대표되는 입법만이 정치권 내 합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등 미래에 관한 일을 다루는 셈인 바, 정치가 미래를 다루는 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권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을 하느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위한 일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당장의 제도적 개선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후 에너지 전환, 연금 개혁, 인구 감소, 노동 개혁 등 30년 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문제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정치권의 과제라고 본다.

김세연 국민의힘 前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이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정치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방식, 방향, 양식이 국가별로 다른 상황일 뿐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발전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기준 삼자면 민주공화국을 규정하는 헌법 1조 1항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된 정치체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더불어 공화주의를 추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머릿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결론 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와 숙의를 거치도록 하고 권력분립을 지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세연 前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정치적 합의 프로세스가 거의 망가지고 극단적인 대결만 하는 양상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해도 객관적이고 이성적 투표가 아닌 분노 및 심판 투표의 경향을 띠며 정치 지형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전폭적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조정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양상과, 정치가 이를 통합하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조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정치 행위의 역할이 한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역할의 정도가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도 정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되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든다. 조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가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 여러 기능 중 하나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 역할과 균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 내 권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권력의 입지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권력을 누르려는 듯한 한국 정치권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을 ‘자랑스런 타협’과 ‘필요한 통합’이 정치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치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기도 하지만 미래와 현재 모두를 살펴야 한다고 보며, 분열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권 내 자랑스러운 타협과, 사회 내 다양성 존중을 강조한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는 2015년 1월 이래 본인이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 정치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전쟁터가 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예전에 여야원내협상이 있을 경우, 기자들은 협상과정 취재를 위해 장시간 노력한 반면, 최근에는 시간이 지나도 딱히 협상 결과물이라 할 게 없고 신뢰 관계도 허술한 게 느껴지는 것이다. 박 기자는 죽이지 않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가 탄생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5-6년 사이에 한국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과 포용이 정치권에 필요하며, 정치적 대립 구도에서 독자들의 반응 또한 양극화된 정치에 걸맞게 극단화된 것을 체감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홍비 前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은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으로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너무 과신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민주주의라고 본다. 주홍비 前 청년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이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주홍비 前 청년부대변인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전폭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가치나 규칙으로는 자기 성찰, 관용과 같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김동민 나비1020 대표는 현재 한국사회가 다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하며 생활 속에서도 민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동의 속에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 받거나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김동민 대표

는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 역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동민 대표는 또한 한국사회가 다양성이란 가치를 더 추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길러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를 육성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만든다면 논의의 테이블을 양질로 채우는 과정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2. 정치권에서 주요 정당들 간의 대립은 물론 시민사회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극단적 정치 환경에서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금, 소모적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권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충분한 숙의를 위해 국민의 대표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단기적 처방으로서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타협을 할 수 있을지를 들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전폭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의 정치 행위는 자신의 지역구와 진영을 넘어서 국가와 가장 큰 단위인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걸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 과정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한 Yes/No, 흑백으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킨 4지선다의 교육에서 ‘어떤 것이 다른 답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양극화된 교육 상황 속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자랑스러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식이나 유럽식 정치 교육 도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만이 아니라 일상 속 갈등 조정에 관해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방법을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세연 국민의힘 前 의원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과 정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동에 능한 어떤 또 다른 세력이 국민과 정치 간극을 더 벌릴 수도 있는 것이다. 김세연 前 의원은 특히 정치 면면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는 언론의 프레임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비판의 정치에서 대안의 정치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 정치권에서 100대 0으로 전개되는 반대 정치가 아닌, 절대적 대안 대신 상대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안 정치를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치문화는 각 진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언급한다. 조정훈 의원은 또한 한국 정치가 좀 더 현실감이 있어야 하며, 정치가 이념보다는 생계형 대안, 생활적 내용으로 승부하고 국민들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여야당이 100% 찬반으로 나뉘지 않고 정당 내에도 여러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소신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신파들이 당리당락과 별개로 제 목소리를 낼 때 언론도 정론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여당과 야당 모두가 반발을 하는 사안에 관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언론도 좀 더 제대로 된 기사들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주홍비 前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은 제도정치 대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적 의사결정이라고는 점을 감안 시,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제도정치 대표들이 제도화 시스템으로서 사회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 제도, 선의의 불문율이라든가 타협과 합의의 문화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단기적으로는 정당법과 국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김동민 나비1020 대표는 한국사회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이슈로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치권 내 대화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현재 한국 정치가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어 대화를 배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김동민 대표는 또한 현재 한국 정치지형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든 지형이라고 지적하는데, 대통령 한 마디에 의회가 양분되고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면에서 김동민 대표는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정치에 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튜브 등 1인미디어가 일상화된 오늘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제2세션: 시민민주주의의 미래

질문 1. ‘시민 없는 시민단체’란 비판이 제기된 지 꽤 오래되었다. 이를 극복 혹은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2. 개인들은 이슈별로 자기자신의 문제와 연결되어야만 참여한다. 동시에 기성 단체에 대해 냉담하다. 이런 사회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어젠다와 전략은 무엇인가?

하태욱 날아 공동대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의미로서, 시민 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단체들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하태욱 대표는 ‘시민 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측면에서 한국 내 시민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 제도적 여건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든다.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의 장을 넓혀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민운동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민운동의 이미지는 자극적 현수막과 집회, 소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는 현재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으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기반한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시대적 한계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 박태순 대표는 과거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국가를 어떻게 정상화 시키느냐, 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정상화 시키느냐에

주안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맞는 단체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면에서 박 대표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시민단체들이 자율과 자치를 핵심 이념으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표는 시민 중심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공론포럼이 설립된 바 있으며, 정부 주도의 공론장이 아닌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인호 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은 과거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는 문제 해결이라는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면, 요즘의 시민단체들은 네트워킹을 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김인호 위원은 시민단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두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요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시민단체가 많아 보이는데, 김인호 위원은 큰 주제에서 좁혀 나간 주제들이 나의 관심사와 점점에 있고, 나 자신의 참여로 인하여 무언가 해결이 가능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민들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두번째로 김인호 위원은 시민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관의 유착으로 인하여 연구용역자 수준에 머물러 관이 요구하는 것만을 다루며 시민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와, 두번째로 관과 유착하지 않지만 점점 궁핍해져서 그 대안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되는 시민단체의 경우가 있다. 김 위원은 결국 자생적으로 시민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유성운 중앙일보 기자는 대중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며, 시민단체 관련 기사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언론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키워드 등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성운 기자는 언론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유성운 기자는 정의롭고 권력이 기생하지 않는 시민의 입장에 눈높이를 맞추는 의미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생각해 볼 때, 지금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가 전문성 중심, 정치적 대의 그리고 국가주의 어젠다 쪽으로 편향된 채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정재관 교수는 시민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철저하게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해서 동네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서의 시민단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재관 교수는 풀뿌리민주주의 운동 중심으로만 가면 정책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하는데, 정책적 효과가 없는데 제 아무리 생활밀착형 이슈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딜레마의 해법은 생활 밀착형, 미시적 이슈들을 어떻게 추상적, 거시적 이슈들과 연결시키며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질문 3. 공론장을 파당적인 유튜브 등 미디어가 장악하고, 편파적인 거짓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질문 4. 시민사회는 순수 공익 목적의 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그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재정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특수 이익 혹은 세력과 결합하여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스스로 기득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대표들의 생각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5.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는 정부와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유착되지 않고 날선 비판을 유지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는 꿈만 같은 이상인가?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론장의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며 공론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목소리 중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논의들이 공론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념적 당파적 차원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기에 공론장을 파당적인 유튜브 등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정재관 교수는 또한 한국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가 배타적인 영역에 있지 않고 시민사회가 마치 국가권력에 복속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인데, 한국 정당들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이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이해와 욕구, 자발적 참여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선거철에 인적 차원에서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관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현재 봉착한 문제가 시민사회만의 책임은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에 있다고 지적한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시민운동이 필요한 의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갖추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현장, 마을 단위에서 의제를 발견하고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힘을 형성하고 의회 및 여타 국가기관과 협력, 연대할 수 있는 소통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시민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정치의 영역 등에서 완전한 형태의 도덕성의 잣대나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단체에 대하여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대기보다는 각 활동분야에 합당한 직무윤리를 토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2020 년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 미래) 패널 (가나다순)

제1세션

- 김동민 현) 나비1020 대표
-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 박순봉 현) 경향신문 기자
- 박용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윤정 전) 광명시의회 의원
- 조정훈 현) 시대전환 의원
- 주홍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

제2세션

- 김경동 현) 영텐트 총괄디렉터
- 김인호 현) 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
- 박태순 현) 한국공론포럼 대표
- 유성운 현) 중앙일보 기자
- 이형용 현)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정재관 현) 고려대학교 교수
- 하태욱 현) 날아 공동대표

- 담당 및 편집: 이은지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7) ej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